

2022년 계속고용 강제 추진... 고령자 고용시 인센티브 ↑

정부, 정년연장 사실상 공식화

TF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 논의 노인 위한 고령친화도시 설계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 대비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협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고,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하는 한편,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협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3월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가지 중장기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년 늘리고 노인기준도 올린다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예

산 296억원을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정년연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두번째 인구대책 분야로 학령인구 감

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층 감소로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대비해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 병력은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군 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세번째 인구대책은 고령인구 대응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 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이 1명도 안 낳는 나라... 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정부가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늘리기 등 인구구조 변화별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선 것은 현재 심화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0.98명)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도 30만명을 위협받는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속도를 더 빨라져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고 유소년·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2033년 142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수수료 받아 회사와 반 나눠도 역대연봉”

>> 1년 '잔심부름에...' 서 계속

B증권사 PB는 “잘나가는 PB들은 차, 시계 등 명품을 공부해서 추천하고 와인, 미술 등도 공부해서 고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서 “예전에 제일 큰 고객의 취미가 낚시여서 주말마다 낚시, 캠핑을 하러 많이 다녔다”고 했다.

◆“서비스를 넘어 신뢰를 쌓아야 돈을 맡긴다”

증권사 PB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신뢰를 위해서”라고 답한다. 고객의 부탁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직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고객 자금을 모을 수 있다.

C증권사 PB는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죽고 싶었다. 고객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60%까지 갔다. 그때 나조차도 확신없이 고객

에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고, 대부분의 VIP 고객이 내 말을 믿어주고 기다려줬다. 결국 1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모두 회복했다. 만약 그때 고객이 돈을 다 뺐으면 정말 살길이 막막했을 거다”고 말했다.

고객의 신뢰를 얻으면 증권사PB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큰 지점의 PB들은 수익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월급에 VIP 고객을 통한 판매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A증권사 PB는 “펀드 판매 수수료가 1%라고 치면, 10억원어치만 팔아도 1000만원의 수익을 얻고 들어간다. 또 주식을 매매할 때도 0.5% 수수료를 받아서 1억원어치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번 수익을 회사와 반 나눠도 역대 연봉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중소기업 연구 인프라 갖춘 곳은 1%

부품 국산화 외치지만 갈 길 멀어 기존 연구소 수도권 쏠림현상 뚜렷

국내 중소기업 중 자체 연구 인프라(기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부품 국산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중소기업은

360만882곳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4만906개, 연구원은 19만 3178명에 그쳤다. 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하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비율은 1.1% 수준인 셈이다.

그나마 있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해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전체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65%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48%가 수도권에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란 평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부

설 연구소의 분포 비중을 보면 경기(31.1%)와 서울(28.7%)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지자체 중에선 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제주와 세종의 경우 나란히 0.4%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으로 중소기업 기술 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국내 5대 발전소, 10년간 체선료로 4786억 지급

기상악화·정비공사 등 이유로 꼽아

국내 5대 발전소(기원)가 지난 10년간 기상악화·정비공사 등 이유로 화물을 제때 선적·하역하지 못해 선사(운송사업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47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선료는 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이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전소기업 5개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보상한 체선료는 4786억3700만원, 체선일은 2만3876

일이다.

체선료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하루 체선료율에 초과시간을 곱해 산정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1427억 3400만원(체선일 7335일)로 가장 많이 지급했다. 이어 서부발전 984억5000만원(4220일), 중부발전 878억9800만원(4385일), 남부발전 760억1700만원(4268일), 동서발전 735억8300만원(3668일)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체선료 증가율은 중부발전이 48%로 가장 가파른 수치를 보였다. 이어 서부발전 35%, 남부발전 29%, 동서발전 28%, 남동발전 23% 순이다.

남동발전은 다른 발전사에 비해 체선료·체선일이 많은 이유로 “연간 석탄사 용량이 타사 평균 대비 약 1.7배 높은 수

준”이라며 “배선계획의 난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급한 사례는 지난 2월 18일 서부발전이 일본 선사 M.O.L에 13억3700만원을 보상한 것이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해당 화물은 하역 대기했고, 이때 체선료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전소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체선료 증가는 영업이익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급선 다변화로 효율적 배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도로공, 5년간 하이패스 요금 3.5억 더 걷어

전체 68%, 2억3873만원만 환불

한국도로공사가 시스템 오류로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요금을 3억5000만원 더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로공사 자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가 초과로 걷은 하이패스 요금은 3억509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15만7000원(2129건) ▲2016년 1799만4000원(2516건) ▲2017년 9631만6000원(1만

3032건) ▲2018년 1억5185만원(2만565건) ▲올해 8월 말 기준 6858만5000원(9037건)이다. 특히 지난해 잘못 걷은 금액은 2015년 대비 3년 사이 9.4배나 급증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전체 중 68%인 2억3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보완해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